

지역 이기·발목 잡기·바꿔 먹기 난무

■ 난립하는 특별법

‘낙후지역 개발’ 취지 퇴색 ‘국고 따내기’ 실효성 없어

특별법은 지역적 불균형과 법률 적용 여건이 달라 발생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특별법이 난립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흥정이 오가는 등 본래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다. 또 특별법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지적이다.

◇발목잡기 특별법=가장 문제가 큰 것은 지역 개발관련 특별법 제정이다.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본래 목적은 낙후·소외지역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 있지만 이와는 동떨어진 제 지역이기주의 수단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수도권에 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미 통과된 관련 특별법에 기초해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정부부처가 연기·공주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김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천시 특별법안’이 제출돼 균형발전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청사 등의 이전으로 급격하게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는 시대정신에 거스른다는 분석이다.

또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특별

법 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해당지역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맞대응 특별법도 만연=지역대립의 악습은 특별법 제정과정에도 적용돼 ‘정치적 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광주시가 지역활포 모색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영남권에서는 경주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지원 특별법’카드를 들고 나와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다 충청권에서는 백제권 문화도시 복원을 위한 ‘사비역사도시 복원 조성지원 특별법’을 제출해 지역간 맞대응 성격 띠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맞불을 놓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경남도, 부산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개발 특별법’에 대응한 ‘동해안 광역개발 지원 특별법’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남해에는 해상국립공원 면적이 넓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행위제한이 많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는 특별법이 제기됐다. 그러나 동해안은 수산양식장 등이 거의 없어 특별법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남해안의 규제철폐와 정부지원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배경분석도 있다. 이처럼 지역별 맞대응 성격

■ 지역개발 관련 주요 특별법

명칭	내용	진행단계
F1 지원 특별법	F1 대회 경주장 건설 및 기반시설 지원	문광위 계류
남해안 개발 특별법	남해안 규제완화, 개발사업 지원	진교위 계류
서남권 개발 특별법	서남권 물류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	구상중
동해안권 광역개발 특별법	동해안 규제완화, 관광기반시설 확충	진교위 계류
경주 문화역사도시 특별법	경주 문화역사 유적 보존 및 기반 확충	문광위 계류
사비역사도시 복원 조성지원 특별법	백제권 문화역사도시 복원	문광위 계류
과천시지원특별법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	행차위 계류
세안금 종합개발 특별법	세안금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상중

의 특별법이 제출되면 정치권에서는 주민여론을 의식해 서로 밀고 당겨주는 ‘폼앗이’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용성 있나? =특별법은 정부의 막대한 행·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전남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개발 특별법의 경우 기존의 사각간접 자본 투자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2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F1특별법도 경주장 건설과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확충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남·동해안개발특별법 등에도 정부의 엄청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실제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의 예산투입을 ‘강제’한다기보다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법은 입법단계부터 그 목적과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혼선을 줄임으로써 낭비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7> 제조업 시장은 애국자



집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전념하는 제조업주들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다. 하남산단내 전동기 생산라인.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자리·경제 근간 ‘지킴이’ 자금·인력·판로난과 ‘사투’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무조건 버려야죠. 제 한 몸이라면 훔칠 뎀도 도망이라도 갈 텐데, 300여명의 직원들이 딸린 몸이라...”
광주시 광동산업단지내 전동기 제조업체 K대표의 애가다. A업체는 수년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원자재가 예타 원·달러, 원·엔환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K대표는 “일본 현지업체와의 경쟁력이 지난해 초보다 25% 가량 떨어진 상태지만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모기업과의 공정개선활동, 신제품 개발 등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하면 바보’ 비아냥

10여년 동안 대기업 기술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사표를 낸 J모씨는 ‘남들처럼 편하게 살기 위해’ 한때 모델업에 손을 대는 등 ‘외도’끝에 결국 제조업으로 돌아왔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농기계 생산업이라 살림은 어렵지만, 마음만은 편하더라는 것이다.

‘제조업 하면 바보’라는 비아냥이 난무하는 세대에 광주·전남지역에는 제조업을 천직(天職)으로 여기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집까지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기술과 열정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다.

광주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산업 가운데 고용비중은 12.7%에 불과하다. 생산액 비중은 26.6%에 달해 광주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천여 달러의 수출액 중 제조업 분야가 86%에 달했으며, 절대 생산액에서도 세계 8위를 점하고 있다.

하남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고질적인 자금난·인력난·판로난에도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불류난까지

겪으면서도 제조업을 외면하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순수한 ‘애국심’만으로 제조업 하기관 여간 어렵지 않다. 높은 담감과 각종 행정규제, 고임금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노사분규 등을 뚫고 이윤을 창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20여 업체 해외 탈출

이같은 사정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20여개 업체들이 최근 4~5년 새에 중국행 보따리를 싸고, 일부 대기업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외국행 티켓’을 산 국내기업만 해도 5천500여개에 달했다.

기업들의 지역내 투자감소 및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일자리 감소→소비역력 감퇴→국내생산 축소→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더 심각한 것은 기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불확실한 경쟁관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과 도전을 이끄는 기업이 정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업이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 기업이 자신이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환경 곧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 기반 지원, 규제완화 등 제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내부 갈등 우려 경선 포기

민주 광주시장 위원장 김영진 서구를 위원장 합의를 추대기로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을 통해 시장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김영진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시장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김영진 前의원

주당 소속 구청장 4명은 시내 모 음식점에서 오찬을 갖고 김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진 前의원 당이 이처럼 광주시장위원장을 선출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바꾼 것은 경선이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시민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경우 통합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영진 서구를 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시장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된다.

앞서 민주당 부대표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위원장 7명 전원, 외국 출장중인 황일복 남구청장을 제외한 민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을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유종필(가운데) 현 시장위원장과 최경주(오른쪽) 북구를 지역위원장이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공동 사퇴의 변을 발표한 뒤 강박원 광산구 지역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위정량기자 jwii@kwangju.co.kr

이 후보로 등록했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졌다. 그러나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 등 민주당 광주시장의 인사들간 불화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5일 민주당 소속의 박시장, 구청장, 지역위원장, 양 후보 등이 오찬회동을 갖고 ‘합의추대’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회동에서는 두 후보의 양보를 받아 사퇴를 기정 사실화한 후 김동신 북구갑 지역위원장, 김영진 서구를 지역위원장, 강박원 광산구 지역위원장 등을 신임 광주시장 위원장 후보로 가른했다. 하지만 김 북구갑 위원장은 최경주 후보가 반대하고 강 위원장은 본인이 고사를 해 결국 김영진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러분의 이웃, 광주고려병원이 환자의 희망을 가꾸겠습니다

사람의 살거름 담은 사랑나눔 뜻지킴이
나눔의 감동을 전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충만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과 밝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광주고려병원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살거름을 심어줍니다.

진료과목

- 내과: 내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노인학과, 영생학과, 방사선과, 핵의학과, 진단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방과, 예방의학과, 건강관리센터

진료시간

내과: 08:00~18:00
외과: 08:00~18:00
소아과: 08:00~18:00
산부인과: 08:00~18:00
안과: 08:00~18:00
이비인후과: 08:00~18:00
피부과: 08:00~18:00
신장내과: 08:00~18:00
소화기내과: 08:00~18:00
흉부외과: 08:00~18:00
핵의학과: 08:00~18:00
진단의학과: 08:00~18:00
응급의학과: 08:00~18:00
치과: 08:00~18:00
한방과: 08:00~18:00
예방의학과: 08:00~18:00
건강관리센터: 08:00~18:00

광주고려병원 남부원리서 병무계(동구) 2층 4호실
대표전화: 06-2727-9000 FAX: 030-9001